

환경마크 인증기준 강화 “시급”

KEI, 유해물질 급격히 늘어 문제 ... 화학적 안전성 제고해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신용승 박사)를 통해 국내 녹색구매 대상제품 및 화학적 기준설정 현황을 진단하고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KEI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공공기관의 무구매제도 시행이전인 2003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해 약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녹색구매는 환경마크제도(친환경상품진흥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대상제품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기기·가구,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07개의 제품군이며 환경마크 인증제품수는 총 27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 가운데 페인트, 사무용 목재가구, 토너카트리지,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절수형 수도꼭지, 화장지 등이 인증제품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의 인증제품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 대상품목 가운데 유해물질 관련 인증기준을 포함하는 대상제품이 페인트, 사무용 가구, 토너카트리지,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과 관련된 품목에 집중돼 있으며 이밖에 소비자에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아직 다양하게 포함돼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대상제품을 다양화(화장품, 스프레이제품, 살충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기준으로 과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의 일반적인 환경관련 기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해물질 관련기준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07개의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가운데 화학적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는 제품군은 총 35개 제품군(33%)에 달하고, 실제 인증을 받은 제품수는 1174개 제품으로 전체 인증 제품의 절반가량(4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중금속류, 포름알데히드, VOCs, 유기주석화합물 등 소수에 국한돼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심물질을 적극적으로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녹색구매에서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의 장애요인으로는 정보부족, 실질적 방법론 부재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이밖에도 경제적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족 등이 기타 요인으로 제기됐다.

<화학저널 2006/04/17>